이인영 "남북, 이산상봉·자유왕래 제안"

판문점 견학센터 개소식…"연락 채널 복원 희망"

"어떤 상황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준비"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4일 판문점을 찾아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을 북측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기를 소망한다"면서 세 가지 제안 중 하나로 연락채널 복원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의 통신이 복구되기를 바란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복원되고, 재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과 판문점 내 남북의 자유왕래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산가족의 절실함을 생각할 때 판문점에서 소규모 상봉이라도 재개돼야 한다"면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당장 어렵다면 화상상봉과 서신교환 등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내 자유왕래에 대해서는 "남북의 경계를 넘는 평화의 한 걸음을 수많은 사람이 넘나드는 평화의 길로 만들어 낼 때"라면서 "함께 비무장화를 이뤄낸 만큼, 판문점 공간 안에서라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은 9·19 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합의이행의 현장"이라면서 "지금 남북의 시간은 잠시 멈춰 있고 신뢰와 관계복원을 위한 과제들도 남겨두고 있지만, 판문점은 '작은 평화'의 시작이자 '큰 평화'를 열망하는 희망의 근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측 주민들을 향해 "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이라고 칭하고 "이 길을 따라 더 큰 왕래로 갑시다.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간을 다시 설계해 나갑시다"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개소식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관계는 아직까지 상황을 격화시키거나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1월 초로 예정된 북한 당대회 등 정치일정을 통해 북측이 (남북관계) 현상을 변동시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TK·PK 예산 협력의원 할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배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사업이나 예산을 책임지고 협력하는 국회의원을 할당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 대표는 이날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대구·경북(TK)에 우리 당 의원이 없고 부산·울산·경남(PK) 지역도 취약한 편"이라면서 이런 협력의원 제도 실시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시 지방대학 출신 비율을 높이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장치를 둔다면 그런 문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지방할당제도와 관련해 지방 학교장의 추천 인재들이 그중에 일부로 포함돼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다"면서 "그것을 약간 늘리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이 시·도통합을 추진 중으로 매우 주목하고 있다"면서 "통합 전후 과정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하려면 청년 일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어야 하며 그러자면 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의료에 관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경북에 추가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의원 16명 아직 다주택"

3월 말까지 상황 해소 권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가운데 16명이 아직까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 윤리감찰단은 4일 보도자료에서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10월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16명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농가 주택',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지분' 등을 이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했다"며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2명이다. 당은 이들에게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출범 본궤도…초대 수장 누가 될까

정년·경력 제한에 정치 중립성까지…적임자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어 추천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후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이 65세다. 정년을 넘긴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또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61·13기) 변호사, 이정미(58·16기)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위원,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 조현욱(54·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결격사유가 없어 공수처장 후보 자격이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진국 감사위원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여권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장 인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시민후보·야권연대' 주목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시민후보'를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진영과 당파를 아우르는 '반문 후보'이면서, 동시에 제도권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중진의원 만찬에서도 김용태 전 의원이 "서울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면 국민의힘 간판을 뗀 후보가 필요하다"며 정의당 지지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시민후보 추대론'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무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탄생시킨 2011년 단일화 모델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박원순·안철수와 같이 정치권에 '신예 돌풍'을 일으켰던 사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민후보론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후보경선을 통해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경선을 통해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새 얼굴이 나타난다면 고려해볼 방안이 '시민후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야권연대를 위한 '러브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모두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